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136-041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호 삼선빌딩 4층 전화(02)744-9063 팩스(02)745-9804 하:chjk49 전·나:JCMK

성명서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서고
	A3-6	14

과연 외국인노동자 관련 입법안이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법안인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기협)에서는 경제위기논리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과 동시에 산업기술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왜곡 보도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중기협의 왜곡된 선전 논리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중기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안)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서명용지를 통해 고용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 중소기업에서 추가 고용분담금이 있다는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고용분담금에 대한 액수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선전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예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포함하여 1인당 60만 8천원과 매월 송출회사에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연수생 1인당 2만4천씩 납부하고 있음에도 추가 고용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식의 선전은 해당 중소기업을 기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중기협의 '노동3권과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임금이 보장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내외국인 균등대우 원칙 및 노동3권보장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내외국인 동등대우 문제는 법제정시 외국인을 근로자로서 인권과 신분상 자격을 보장한다는 것이지 임금을 무조건 국내근로자와 똑같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임금은 노동의 숙련도, 생산성 등에 따라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국내 근로자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UN 인권위원회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이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다른 지위에 따라 구별 없이 선언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40년이 훨씬 지난 한국에서는 이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강요한다는 것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중기협에서는 경제위기논리를 내세워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을 허가할 경우 임금상승의 부담을 크게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밝혀둔다. 가까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허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노동자들의 임금 2/3정도를 받고 있다. 또한 임금의 문제는 자본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을 허가한다고 해서 임금이 한국 노동자들보다 많이 받는 것은 경제원리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는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이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의 문제를 값싼 임금의 문제로 해결한다면 이는 마약중독자에게 계속적으로 마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결코 아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96년 8월말 현재 도입된 연수생의 약 35.2%가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다.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이 속출하자 연수생 고용업체에서는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incentive) 차원에서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타 수당을 작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더 얻어주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수생의 임금은 현재 월 72만원대(중기협 자체 조사에서도 70만원으로 밝혀짐)로 국내근로자의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해마다 늘어만 가는 불법취업자의 문제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산업기술연수생제도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불법체류자 발생으로 인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나 이들에 의해 지질러지는 사회적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몇 달전 발생한 페스카마호 같은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자국 기업의 몇 푼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타국 국민의 인권적 침해나 노동착취 문제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발상은 국제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 국제적 인권탄압, 노동착취 등의 비난과 反韓감정 촉발로 주요 기업 진출대상인 동남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 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중기협과 송출회사간의 검은 비리가 공공연한 비밀로 되고 있다. 흑자는 1000억원대가 넘는 거래가 오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재 중기협이 사회적 문제가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런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윤을 전면 공개하여 대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금 몇 푼 낮추는 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근로의욕을 느낄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과 연구개발비 확대, 그리고 품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설비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중소기업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